

● 지역혁신센터(RIC) 6개 대학 지정..10년간 4백 20억 지원

산업자원부는 대학이 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역량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6개 대학을 신규 지역혁신센터(RIC)로 지정하고 10년간 4백 2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3월 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혁신센터는 조선대 치과용 정밀 장비, 서원대 친환경바이오 소재·식품, 원광대 차세대 방사선, 계명대 예측설계기반 전자화 자동차부품, 순천향대 고부가 생물소재 산업화, 목포대 IT기반 중소형 조선산업 등이다. 이들 센터가 설치되는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센터에 투자하게 된다.

산자부는 이들 대학과 사업비 지원 및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의 2백 20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였다.

● 대학에도 친환경 기숙사 들어선다

대학에도 친환경 기숙사가 들어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 7일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의한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산대 등 올해 신·개축에 들어가는 4개 국립대 기숙사에 재생에너지인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상에 비해 여름에는 낮고 겨울에는 높은 지하의 열을 이용하는 이 시스템은 초기 투자비는 높지만 전기 및 도시가스 냉·난방 방식에 비해 투자비 회수기간이 각각 9.6년과 4.5년에 불과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는 "저렴한 비용으로 유해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환경 친화·에너지 절약형 학교 시설을 구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 및 에너지 교육의 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올해 부산대, 안동대, 전북대, 서울교대 등 4개 국립대에 민자유치 방식으로 5백 44억 원을 투입, 2천 7백 9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 타 부처 대학 지원사업도 '특성화 지표'로

앞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사업도 특성화 정도에 따라 지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5일 인

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 '대학 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교육부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가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설계할 때 교육부와 사전협의토록 의무화하고, 특성화 우수대학에 정부 재정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규태 대학구조개혁팀장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구조개혁이 대학의 특성화 분야로 집중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를 통해 대학구조개혁과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고, 부처별 대학 재정지원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성과를 종합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대학의 기능별·학문영역별 강·약점 현황을 보여주는 특성화지표를 개발해 각 부처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성화지표에는 특성화 분야로 교수와 학생 정원이 배분된 비율, 특성화 분야로의 연구비 집중도, 연구논문 실적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올해 8월 대학구조개혁재정지원 사업 등에 '특성화지표'를 시범 적용,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07년부터 각 부처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는 교육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대학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 국장급 9명과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고등교육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2005년 기준으로 정부 각 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모두 2조 5천억 원으로 교육부 56%, 과학기술부 17%, 산업자원부 11%, 정보통신부 4% 수준이다.

### ● 대학들 송도 이전 '러시'

연세대가 지난 1월 55만 평의 송도캠퍼스 건설 계획을 발표한 후 주요 대학의 진출계획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송도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대학은 가천의과대, 고려대, 중앙대, 서강대, 카이스트 등으로 이들 대학은 송도가 영종도 국제공항과의 근접성이 높아 외국과의 교류가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특화 분야의 연구소나 산학협력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천의과대는 지난해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생명과학부와 연계된 생명과학연

구소를 송도로 옮길 계획이다.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테크노파크 본부 앞 4천여 평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3층 규모의 연구소로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3월 9일 인천 부시장이 교무회의에 참석한 고려대는 인천 지역 개발과 관련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의했다. 현재 고려대는 생명분야를 특화하기로 하고 20만 평 규모의 BT 연구시설을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세우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대 역시 송도 지역 진출에 적극적이다. 2010년 개교 50주년에 맞춰 20만 평 규모로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제대학원과 영산대학원, 자연과학 계열의 산학협력연구소도 이전할 계획이다. 서강대 측은 "현재 캠퍼스에선 더 이상 건물이 들어설 면적이 없다"며 "중요 연구소와 이공계 연구소 등을 송도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대는 공연·예술 분야를 특성화한다는 계획으로 연세대 송도캠퍼스 부지 옆에 35만 평 규모로 국제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을 준비 중이고, 이미 한 달 전쯤 인천시청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추진 예산 규모는 1조 5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2010년에는 1만여 명 관련학과(연극, 영화, 국악 등) 학생(외국 학생도 포함)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최정일 중앙대 공연·영상 특성화 사업단장은 "지역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복합문화단지로 한류의 메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같은 대학들의 움직임은 기존의 캠퍼스 운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특화된 부분을 적극 키워나가 경쟁력을 살리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청은 각 대학들의 기획안과 장래성을 살펴본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현재 대학들에 제공할 수 있는 부지는 1백여 만 평 정도이고, 연세대 부지를 제외하면 50여 만 평 정도밖에 안 된다"며 "송도 지역을 국제화 도시로 키워나가기 위해 외국과 교류할 수 있는 이공계 연구소나 산학협력연구단지 등을 우선순위로 둘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들이 들어서게 되는 지역은 송도 5·7공구로

내년 말 매립이 끝나고 분양에 들어가게 된다.

송도경제자유구역은 2009년 인천대교 완공과 지하철연결이 이뤄지면 영종도 국제공항까지 15분밖에 안 걸린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외국과 교류가 필요한 연구소나 산학협력 기관이 유치되기에 유리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 **수도권대학 특성화에 6백 억 지원**

올해 수도권대학 특성화지원사업은 계속지원과 1년짜리 신규선정지원이 함께 실시된다. 신규선정지원에서는 구조개혁보다 특성화 영역의 비중이 약간 높아졌다. 또 사후관리의 성격을 띤 성과지표 항목이 신설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도 수도권대학 특성화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총 지원예산은 6백억 원으로 계속지원과 신규선정지원으로 나눠 지원한다. 계속지원은 지난해 선정된 17개교 29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성화분야의 교육여건, 취업률, 진학률 등 사업성과를 평가해 계속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

정한다. 올해는 총 4백 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차평가 결과 1백점 만점에 60점 미만이거나 횡령, 유용 등이 발견될 경우, 사업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신규선정은 10개교 안팎에 1백 80억 원이 지원된다. 올해만 해만 지원하는 단연도 사업이다. 지난해 선정된 17개교를 제외한 수도권 4년제 대학 57개교가 대상이다. 대규모(재학생 1만 명 이상) 4개교 내외, 중·소규모 6개교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비교우위가 있는 특성화 분야면 어떤 주제든 신청 가능하다.

신규선정 참여조건 및 계속지원 유지조건은 지난해보다 강화됐다. 2006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53%(산업대 42%)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에는 50%였다. 전임교원은 2004년 12월 발표한 '대학구조개혁방안'에 따라 매년 3%씩 높아져 2008년까지는 59%(산업대 48%)를 확보해야 한다. 신입생 충원을 90%, 산학협력단 설치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신규선정의 경우 성과관리를 위해 자체평가지표가 별도 항목으로 분리됐고, 학생정

원·교수 수·연구비 등 대학의 자원이 특성화 분야로 집중된 정도가 평가지표로 들어간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다. 특성화 영역에서는 '관리체제' 항목이 신설(10점)됐고, 정책유도 영역의 구조개혁 항목에서는 '특성화 분야의 자원재분' 지표(배점 3점)가 새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구조개혁을 포함한 정책유도 영역의 배점이 5점 줄어든(35→30) 대신 특성화 영역의 배점이 5점 늘었다(65→70). 교육부는 오는 7월 중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 **적립금 상한선 법제화 추진**

등록금 인상률을 놓고 서울 주요 사립대가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적립금 상한선 법제화에 나서 주목된다.

최순영 의원은 4월 6일 적립금 상한을 골자로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이하 회계규칙) 개정안을 올 상반기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사립대들이 적립금 사용계획조차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

다”며 “적립금이 대학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어 적절한 상한 규모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는다.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을 규정한 회계규칙 제22조의2 조항에 ‘적립금 총액은 대학의 운영수입 총액의 50% 이상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경과규정으로 ‘제22조의2의 조항 개정 당시 적립금이 기준액을 상회하는 대학은 상회분을 3년 이내에 대학의 교육환경개선에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넣을 계획이다.

적립계획의 사전 보고 절차와 관련 규정을 어겼을 때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도·감독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회계규칙 ‘제22조의2’ 조항은 학교장이 적립금의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교육부에 학교회계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전계획 보고 절차가 끝난다는 지적이다.

조성주 보좌관은 이에 대해 “예·결산 자료를 비교해 보면 사립대의 경우 매년 8천억

원에서 9천억 원 정도가 당해 연도에 쓰이지 않고 차기연도로 이월되고 있지만 등록금은 해마다 물가인상률을 상회해 오르고 있다”며 “적립금 중 퇴직적립금과 특정 사업을 명시해 기부한 적립금을 제외하고 남는 적립금의 이자수입 및 원금, 불용적립금의 경우 건축, 장학, 연구 및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해 등록금 인상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순영 의원실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전체 사립(전문)대의 적립금 누적총액이 5조 3천 1백 53억 원에 이른다. 대학 재정운영 규모의 기준을 운영수입이라 했을 때, 4년제 대학 가운데 27개 대학이 운영수입 총액 대비 적립금누계 총액이 50%를 넘었다. 이화여대 272.2%, 덕성여대 180.4% 등 100%가 넘는 대학도 10개에 달한다.

조 보좌관은 “적립금은 합부로 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뚜렷한 사용계획 없이 쌓아두기만 하니까 문제가 된다”며 “묻지마식 적립을 지양하고 초과분을 교육환경개선에 쓰는 취지”라고 말했다.

## ● 사학법 재개정, 국회서도 총돌

지난 4월 13일 열린, 교육·문화·사회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놓고 여야가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사학법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나라당이 먼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학법과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교육위원회 소속의 김영숙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3월 13일부터 사학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사학법 재개정 노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표적 감사 아니냐”며 “지난 3월 1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문제 있는 모법을 시행령으로 보완한다고 하지만, 이는 상수원에 독약을 풀어놓고 집집마다 수도꼭지만 손봐주는 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교수, 직원은 물론 학생까지 의무적으로 포함시켰는데 이럴 경우 학교는 경영 주체가 없어지고 대학 발전이나 경쟁력보다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방향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사실

상 분쟁을 제도화하고 이사회의 경영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은 자료 화면까지 동원해 "개정 사학법이 최소한의 자구 수정도 거치지 않은 채 날치기로 통과됨으로써 법률 체계상 심각한 오류가 있어 즉각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진 의원은 개정 사학법 제14조에는 '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이라 나와 있는 반면 제25조에서는 '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이라고 표현, 용어 사용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장 임명 제한을 규정한 '제54조의3' 도 1항에서는 임명 제한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면서 2항에서는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같은 조에 있는 조문이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한 진 의원은 "수많은 조항에서 법률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형식과 개념정립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통과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등단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5년간 횡령, 회계 부정 등을 포함해 1조 2천억원이 조금 안 되는 재정비리가

있었다"며 "부모님이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마구 횡령할 수 있는 이전의 사학법으로는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었으니까 개정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정 의원은 "개정 사학법은 정당한 국회법에 따라 처리됐고, 그 요체는 투명성과 개방적인 운영,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이라며 "이런 것이 보장될 때 학교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반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나라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 ● 타 부처 재정지원에 구조 개혁 성과 반영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 등이 올해부터 공동 시행하는 '커넥트 코리아' 사업 선정평가에 대학구조개혁 성과가 반영될 전망이다.

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가 지난달 출범하면서 타 부처 대학 재정지원사업에도 구조개혁 성과와 특성화 지표를 반영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타 부처에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교육부가 아닌 타 부처 대학 재정 지원사업에 대학구조개혁 성

과가 반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와 산자부는 4월 13일 두 부처 차관보가 주재하는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커넥트 코리아' 사업에 대학구조개혁 성과를 반영키로 결정했다고 교육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임교원 확보율이 지난 2004년 12월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방안' 수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2005년 50%에서 시작해 매년 3%씩 높아진다. 2008년까지는 59%(산업대 48%)를 확보해야 한다.

정원감축,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 실적도 반영한다. 특성화 분야로 교수와 학생 정원이 배분된 비율, 연구비 집중도, 연구논문 실적 등 특성화 분야로의 자원 배분 정도도 평가지표에 포함될 예정이다.

'커넥트 코리아' 사업은 교육부와 산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대학의 권역별 거점 산학협력단 15개 내외를 선정, 연간 60억 원씩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는 안이 유력하지만 대덕특구

를 독립적인 권역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담당자는 “4개 권역에 15개 내외라 해서 권역별로 기계적으로 사업단 수를 배분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 2단계 BK21 사업 선정

### 결과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4월 26일 2단계 BK21 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분야별 특성화된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이 사업에는 2012년까지 7년간 매년 2천 9백억 원씩, 총 2조 3백억 원이 지원된다.

박호균 BK21 사업선정평가 운영위원장(인천대 총장)은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과학기술, 인문사회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74개 대학 2백 43개 대형 사업단 및 3백 25개 소형 사업팀 등 5백 68개 사업단(팀)을 최종 선정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신설된 지역 우수대학원 분야에 전체 예산의 4분의 1인 7백 7억 4천 7백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을

위해 매년 과학기술 분야 1만 8천 5백 명, 인문사회 분야 2천 5백 명 등 전체 대학원생의 17%에 해당하는 2만 1천 명의 석·박사급 연구 인력이 혜택을 받게 됐다.

2단계 BK21 사업에는 전국 92개 대학 3백 86개 대형 사업단과 5백 83개 사업팀이 신청, 평균 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과학기술 분야는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사업단 수 선정원칙을 따랐다. 질 관리 차원에서다. 그러나 인문사회 분야는 학문 분야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선정 사업단 수를 다소 상향 조정했다.

임상현 BK21기획단장은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과학기술 분야에서 각 대학이 신청한 사업비 규모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작아 인문사회 분야 대형 사업단, 과학기술 분야 소형 핵심 사업팀 등을 추가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분야는 1백 57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기초과학 분야가 51개 사업단, 응용(융합) 분야가 1백 6개 사업단이다. 2단계에 신설된 지역우수대학원 사업을 통해서는 총 58개 사업단에 4백 9억 원이 지원된다. 과학기술 전체 지

원 규모는 연간 1천 7백 38억 원 규모다.

이 분야에서는 지방 대학 가운데 경북대와 경상대가 각각 3개, 1개 사업단이 전국 라운드에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포항공대(8개 사업단)와 KAIST(8개 사업단)가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전국 라운드에서 선정됐다.

인문사회 분야는 사업 공고 당시 45개보다 많은 총 61개 사업단을 선정했다. 매년 2백 80여 억 원씩 지원된다. 지역 우수대학원에는 17개 사업단을 선정, 매년 4백여 명의 연구 인력에게 57억 9천만 원을 지원한다.

고급전문서비스 분야 가운데 의·치의학 분야는 당초 11개교보다 많은 21개교에 1백 68억 원이 매년 지원된다. 임단장은 “의·치의학은 기초과학 분야에 지원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 선정 비율(75% 수준)과 맞췄다”고 밝혔다.

14개교가 신청해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경영전문대학원(MBA) 분야는 공고문의 선정 원칙을 유지해 4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MBA 예비인가에서 떨어진 6개 대학이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

이다. 최고 13억 원을 매년 지원할 계획이다.

핵심 분야는 총 88개 대학 5백 83개 사업팀 가운데 71개 대학 3백 25개 사업팀이 최종 선정됐다. 과학기술 4백 84억 원, 인문사회 90억 원 등 연간 5백 74억 원을 지원한다.

대학별 선정결과와 지원액을 보면 서울대가 44개팀 49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연세대 33개팀에 2백 55억 원, 고려대 28개팀에 2백억 원, 성균관대 28개팀에 1백 58억 원, 부산대 33개팀에 1백 58억 원, 한양대 28개팀 1백 54억 원, 포항공대 9개팀 1백 19억 원 순이다.

교육부는 사업 공고 시 밝힌 대로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목표에 미달한 사업단(팀)에 대해 사업비 삭감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08년, 2011년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해 중요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단(팀)을 탈락시키는 한편, 하위 사업단(팀)과 새롭게 진입하려는 사업단(팀)의 경쟁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엄 단장은 “평가결과를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선정 과정에 이의가 있는 대학의

경우 원하면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 ● 대학 도서관 정책 마련 시급

국내 대학 도서관에 투입된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는 이용자와 대출 권 수는 크게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8일 제주 칼호텔에서 열린 도서관장 회의에서 ‘대학 도서관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이병현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 국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이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2005년 4월)를 인용·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 5년 동안 대학 도서관에 투입된 예산은 2001년 1천 7백 91억 원에서 2005년 2천 83억 원으로 2백 92억 원 증가했고, 장서 수도 7천 3백 62만 권에서 9천 8백 67만 권으로 30%가량 늘었다.

반면 대출자는 2천 1백 36만 명에서 1천 3백 31만 명으로, 대출 도서 수는 4천 7백 37만 권에서 2천 9백 78만 권으로 40% 감소해, 갈수록 대학 도서관 이용이 저조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국장은 “지식강국 실현을 위해 학술정보 공동 활용 체제를 강화해 국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학 도서관을 국가적 핵심기반시설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학술정보자원 디지털화 촉진 △국내외 학술정보 공동 활용 체제 구축 △대학 도서관 활성화 기반조성 등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학술정보자원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대학 도서관이 소장한 고서, 고문서 등 역사자료의 서지, 원문을 디지털화할 계획이며, 올해 12억 원을 투입해 서지 6만 권 원문 70만 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올해 안으로 12개 대학 도서관에 ‘지식정보 디지털 유통 시스템’을 보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국내외 학술정보 공동활용’을 위해서는 5년 동안 10개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를 대학 도서관에 설치해 추가인원·시설 없이 5천여 종의 학술지를 확보, 모든 대학에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연구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지방 국립대 중에

서 1개 대학에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를 마련한다. 소요예산은 2억 4천만 원 가량이다.

이밖에도 '대학 도서관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문헌정보학과 교수 10명을 위촉해 '대학 도서관 정책자문위원

회'를 구성·운영하며 대학특성화 사업 및 대교협 대학도서관 평가의 평가항목을 개선하는 등 도서관 평가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회장 이상범 배재대 학

술정보처장)는 4월 27~28일까지 이틀간 제주도에서 '대학도서관 발전과 위상강화 활동방안'을 주제로 제8차 도서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